

## 대북 식량 지원: 찬성과 반대의 접점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지**난 4월 7일 북한보건부는 “어린이 134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전국 어린이의 15.3%가 영양실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양 주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관리들에게 밝혔다.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종류의 사실을 밝힌 것은 아주 드문 사례이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국제적십자사, 유니세프, 국제식량계획 등의 관련 인사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태라고 증언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150만~200만 톤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1인당 곡물 배급량은 지방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하루 평균 100~350 g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평양이나 전방 부대 군인들의 식량 사정은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감자, 김치, 나뭇잎, 심지어 벼 줄기까지 먹고 있다고 한다. 5월 3일 북경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석한 백용호 북한 수석대표는 “북한의 식량 재고가 3

월 21일 현재 약 6만 톤밖에 안된다”며 “외부의 식량 지원과 봄철에 나는 나물 등으로 주민들의 餓死 상태는 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연변에서 보는 북한의 실상은 더욱 참혹하다. 연변에는 “한 마을에서 수백 명씩 굶어죽어 나간다”, “기아가 심해 인육까지 먹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흘러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3월말, 4월초 연변 지역에 직접 가본 경험으로는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5주년을 맞아 북한은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거의 참석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였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시위한 것이다.

식량 지원을 위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호 단체 파견원들은 현재까지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한

다. 북한의 통제력이 아직은 붕괴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기아 발생 때 국가가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르다. 북한내 상황이 절박하고 중국측 접경 도시의 불빛이 유혹하는데도 두만강·압록강지대는 의외로 조용하다. 북한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강을 건널 수 있으나 국경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넘어온 사람도 식량을 구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시아 연구 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는 “이때문에 북한 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는 상황이면서도 버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회주의적 기근’의 가공할 위험성이다. 아프리카에서 전쟁,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면 아이들과 빈민층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이 먼저 기아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아무리 굶주려도 돈 혹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우선 순위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으며, 다음이 노

인층, 그 다음이 청장년층 순이다. 노인층들은 자신의 몫을 손자나 아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동당원과 군 간부들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원칙적으로 식량은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이 한꺼번에 서서히 기아에 시달리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 많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한 관계자는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 예컨대, 배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이 붉은 빛을 띠는 등의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2,300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구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튼 박사는 “중요한 성장기에 영양실조에 걸리면 회복이 안된다”며 ‘한세대의 기형화’를 우려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면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엔의 한 관리도 “앞으로 백치병이 우글거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사태는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 후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은 식량 지원 여부와 지원 창구 단일화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은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4월 말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전달 과정의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북한 주민을 돕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북 식량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다. 북한 정권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칫 굶주린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연장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되면 미군과 한국군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주게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북 식량 지원은 역효과를 낸다. 여기에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둘째는 대북 식량 지원은 하되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다. 식량을 정치적 카드로 사용해 북한의 4

者회담 참가, 군비 축소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량 지원은 종합적인 대북 정책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식량 지원 창구는 정부 기구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무조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다. 최근 “굶주리는 동포에게 생명의 손길을!”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종교·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대부분 이러한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시민운동이 활기를 띠자 정부 당국은 모금 등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론에 밀려 옥내 모금을 허락했지만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가 보내는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온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언론이 부채질한 ‘국민 정서’에 대한 우려이다. 쌀수송선 인공기 게양 사

건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비록 민간 차원이라도 쌀을 지원할 경우, 국내 보수 세력 등으로부터 또 다시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3월말 정부는 민간 차원의 쌀지원을 허용했다. 또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간접적인 민간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을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직접 접촉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5월 3일 남북 적십자회담은 그 첫 성과이다. 정부의 정책이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간에 동포애·일체감을 회복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은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 식량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동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만난 연변의 조선족들은 “북한 동포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은 왜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가”라며 이구동성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죽어가는 동포를 위해 식량 지원조차 하

지 못한다면 통일을 말한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을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은 인도주의가 정치적·이념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식량 지원은 구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인간, 같은 동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과제이며 통일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사실, 인도주의와 정치적 문제를 혼동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식량 지원은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며 민족적 관점에서조차 식량 지원은 가장 앞선 통일 사업이라는 주장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따라 강경과 온건의 수단을 번갈아 사용하며 허둥대는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변할 때까지 돕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다. 미국, 일본 등 對서방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 유연성있게 대처해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을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북한을 돕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색내지 말고 조용히 도와야 한다. 세계식량계획의 관계자는 “지원 식

량을 판 데로 빼돌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를 알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으로 간 식량의 균량미 전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한이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992년 2월에 발효된 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이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한이 그동안의 남북 대화에서 세워놓은 절차를 통해 식량 지원이 이뤄질 때,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족적 정서에 부응하는 것이며, 북한 당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아니다.

다만, 무분별한 창구 다원화 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창구 단일화 논리를 비판하며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억제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분별한 접촉은 자칫 인도주의적 차원의 순수성에서 벗어나 '정치성'을 띤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북경 남북 적십자회담은 양측의 견해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지원품에 한국적십자사의 마크를 표기하는 것을 수용했다. 북한이 적십자회담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는 표시이다. 식량 문제를 매개로 해서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통일 정책을 책임지고 민간 차원에서 남북 화해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민간 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모금을 통해 남북간의 정서적 이질감을 좁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 식량 문제를 두고 갈라져 있는 여론을 결집해 통일을 대비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